



정부가 스포츠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구본능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한선교 한국농구연맹 총재, 김원길 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 최중준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정몽규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왼쪽부터)가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을 발표한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 경기조작 가담선수→영구제명 2 내부비리 고발자 1억 포상금 3 암행감찰·리니언시 제도 도입

〈비리 자진신고때 처벌 감면〉

“스포츠 비리 근절” 정부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스포츠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선수가 경기조작에 가담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영구제명 등 일벌백계하고, 내부 비리 고발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비리를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lemency)’ 제도가 도입되고, 내부 상시모니터링체제 구축을 위해 암행감찰제도(supervisor)도 신설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최광식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

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8개 체육단체와 합동회의를 열고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최 장관은 “경기조작 등 최근 일련의 사태는 스포츠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종합대책은 경기 조작의 경우 ▲자율적 통제 강화를 통한 공정성 회복 ▲‘가칭’ 프로스포츠 공정센터 운영을 통한 모니터링 ▲암행감찰제도 및 리니언시 제도 도입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근절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 학교체



문화체육관광부 최광식 장관과 각 스포츠단체장들은 스포츠비리와 관련한 향후 대책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연합뉴스

육과 체육단체 운영상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합동점검단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경기조작 관련자는 자격정지 및 영구제명하고 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련 구단은 지원금 축소 및 리그 퇴출을 감수해야 하고,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은 최고 1억원으로 인상했다. 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에 소요되는 심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축구·배구 승부조작 브로커 프로야구 경기조작도 관여”

대구지검 “브로커 두명 축구 승부조작 동일인”

프로축구·프로배구의 승부조작에 관여했던 브로커들이 프로야구 경기조작에도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야구 경기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법 검찰청 박은석 2차장검사는 21일 오후 3시, 2층 상황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재 프로야구 경기조작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브로커 중에 두 명은 이미 창원에서 사법처리된 인물”이라고 밝혔다.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브로커 김 모씨 등이 프로야구 경기조작에도 나섰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렇듯 연루된 브로커가 중복됨에 따라 프로야구 경기조작도 프로축구·프로배구와 유사한 ‘전주(錢主)-브로커-선수 포섭 브로커(전·현직 선수 포함)-단순 가담 선수’의 조직을 갖추고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대구지검은 20일 프로야구 투수에게 승부조작을 제안했던 브로커 한 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등 프로야구 경기조작의 실체와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조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의혹 대상 선수의 소환과 관련해서는 “(선수) 아직 아무도 소환한 바 없으며, 소환 시점을 못박기도 힘들다”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소환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혀 먼저 브로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한 후, 선수들을 소환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박 차장검사는 검찰이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기록지 등 자료 요청을 했다든지 구단으로부터 자체 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KBO나 구단에 어떠한 형태로도 협조나 자료 요청을 한 바 없다. 구단에 확인해보면 알 것”이라고 부인했다.

대구 | 정도원 기자 united97@donga.com 트위터 @united97intl



구단 자체조사, 귀만 있고 입은 없다

■ 없다는 의혹선수, 떠도는 실명 왜?

구단들 “선수가 결백 주장하면 믿을 수 밖에...”
의혹선수 한명도 확인못해 자체 조사 한계

스프링캠프가 한창이지만 프로야구계의 눈과 귀는 온통 검찰의 경기조작 수사로 쏠려있다. 겉으론 평온해 보이지만 해의 캠프에 머물고 있는 각팀 선수단과 관계자들은 국내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물밑에선 한 가지 정보라도 더 캐내려는 움직임이 부산하다. 경기조작세력과 접촉한 선수가 있는지, 가담한 선수는 있는지 구단별 자체조사도 이중삼중으로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구단들은 공통적으로 “우리 구단에는 (브로커와) 접촉한 선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선을 긋고 있다. 사건을 전담한 대구지검 강력부(조호경 부장검사)와 프로야구

계 안팎에선 연루 의혹을 사고 있는 선수들이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구단별 자체조사를 믿어야 할까.

● 자체조사의 한계?

A구단 감독은 21일 “구단의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행히 우리 팀에는 의혹을 살 만한 선수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들었다”면서도 소속 선수 B의 실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얘기에는 “구단이 검찰도 아닌데 어찌겠는가. 나도 그렇고, 구단 관계자들도 그렇고, 해당 선수가 아니라고 하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A구단 감독의 지적처럼 구단별 자체조사는 분명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구속자가 속출하고 있는 프로배구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흥국생명의 모 선수는 구단 자체조사에선 “혈서까지 쓰겠다”며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막상 검찰 소환조사에선 순순히 연루 사실을 자백했다.

● ‘문성현 학습효과’?

구단들이 자체조사를 통해 ‘땃땃하다’는 입장을 전하음에 따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검찰 수사를 관망하고만 있다. 대구지검이 소환조사와 같은 물리적 행동에 착수하지 않은 마당에 KBO 차원의 자진신고기간 설정 같은 대책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구단들은 극도로 신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벅센 문성현처럼 ‘경기조작을 제안 받았으나 거절한 선수’는 있을 법하지만 ‘제2, 제3의 문성현’을 공개한 구단은 아직 한곳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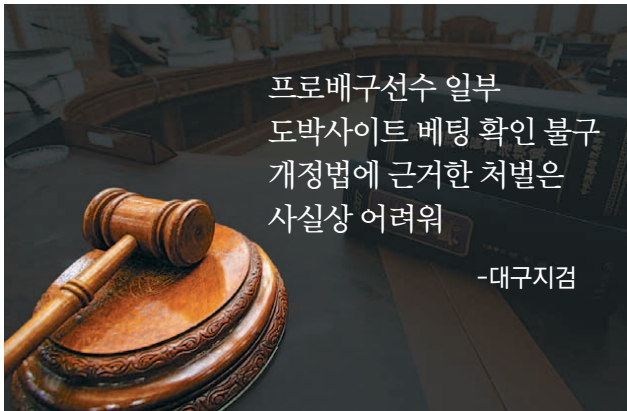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 야구계의 한 인사는 “경기조작을 제안받고 거절했으면 그만인데 자진신고하게 되면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다. 그 경우 아무런 혐의가 없는데도 경기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소환을 기다리고 있는 문성현이 타산지석이라는 얘기다. 어쩌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나비효과’가 이번 경기조작 파문을 계기로 프로야구계에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트위터 @jace2020

법률개정 이전의 ‘불법 베팅’ 처벌할 수 없다?

■ 뒷북친 처벌 규정



프로배구선수 일부
도박사이트 베팅 확인 불구
개정법에 근거한 처벌은
사실상 어려워

-대구지검

프로스포츠의 경기(승부)조작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은 프로배구 선수 일부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직접 베팅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위배되지 않아 법적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

과거 국민체육진흥법의 범위는 합법 루트인 스포츠토토만 해당됐다. 이는 선수들과 구단 직원 등을 포함한 모든 스포츠 업계 종사자들이 마찬가지였다. 베팅 자체가 금지됐다. 한데, 빠져나갈 구멍은 있었다. 스포츠토토가 아닌 경로를 통해 베팅을 하면 처벌할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스포츠토토를 하면 법률에 위배되지만 정작 불법 베팅은 처벌이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전 아니다. 여러 종목에서 불법 행위가 불거지자 이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최근 일부 조항이 개정됐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안이 추가됐다. 이는 17일부터 시행됐다.

검찰은 법률 개정 이전의 베팅에 대해서 ‘형법불소급원칙’으로 개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도 여지는 남아있다.

대구지검 박은석 2차장검사는 “(혐의 선수들이) 과거 불법 베팅을 한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베팅을 하고, 해당 경기를 스스로 조작했다면 죄질이 나빠 형량에 반영할 수 있다. 다른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도 “개정 이전 베팅에 대해서 형법상 도박죄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고, 출전 경기 베팅은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구본능 KBO총재 “개막전 마무리 됐으면...”

‘청정시대’로 불렸던 프로야구에서도 경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상황. 한국야구위원회(KBO) 수장의 얼굴은 어두웠다.

KBO 구본능 총재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최광식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 발표가 끝난 후 “(경기 조작 문제로) 야구계가 패닉에 빠졌다. 최대한 개막 이전에 수사가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구단과 선수 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범위가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의혹이 있으면 깨끗하게 밝히되 2012년 시즌 개막에 무리가 없도록 검찰 조사가 최대한 속전속결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다.

구 총재는 결에 있던 양해영 사무총장에게 “가급적 빨리 사장단 회의(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제고하고, 이번 정부종합대책에 대해 각 구단의 협조를 구하면서 재발방지책 강구를 서두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도현 기자